

공매도 금지에 개미 돌아오나... 투자예탁금·빚투 늘었다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 등에 투자예탁금, 47.9조... 3.2조 늘어
신용거래용자 잔고 4849억 증가
포스코홀딩스 등 이차전지에 몰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이차전지 업종 강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 말 58조원 수준까지 증가한 투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 44조 682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단기 숏커버링(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 수급 및 금리 인상 종료의 기대로 지난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객장 모습. /뉴스1

13일 기준 47조9082억원으로 약 3조 2262억원 늘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감소했던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3일 16조6247억원에서 13일 17조1096억원으로 4849억원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증가했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들의 자금은 이차전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를 3183억원어치 사들였으며, 포스코퓨처엠(2488억원), 삼성SDI(1692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포스코인터네셔널(605억원), 예코프로(457억원) 등을 사들였다.

지난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주식 시장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진한 투자자들은 신용거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9546억원이던 위탁매매 미수금은 9일 기준 1조490억원으로 늘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8일 19억4600만원이었는데 10일 104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매매

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자금으로 주식을 매입 후 빌린 돈을 약정 만기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 거시적 여건이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불필요한 변동성이 야기됐다"며 "미국증시보다 낮게 유지됐던 국내증시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10월 초 수준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 부담 완화에 힘입어 공매도 금지와 관계없이 시장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연말·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 지속에 구조조정 '칼바람'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PF 전담팀 이관
김진영 사장 포함 2명 면직 등 중징계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사업부 줄여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에서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이 나왔다.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둔 만큼 구조조정 '칼바람'도 예상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하이투자증권은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을 포함한 2명을 면직시키는 등 중징계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 김 사장은 부동산 호황기에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전담팀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2018년부터 꾸준히 증권사 연봉 상위권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65억원의 '연봉킹'으



/유투이미지

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부동산금융 부문을 축소시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하이투자증권

의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익스포저) 비율은 136.8%에 달한다. 올해 3분기 80.2%까지 감소하기는 했지만 3분기 우발채무 1조1203억원 중 부동산 부문이 951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징계성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7개였던 부동산 사업부를 4개 본부로 줄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1731억원을 기록했지만, 해외 부동산 PF 총담금 등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768억원)은 전년 동기보다 29.8%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비슷한 조직 개편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만큼 그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면 증권사 내 부동산 중심 조직 개편이 더 나올 수 있다"면서 "각사별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 타격감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도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면 관련 부서를 축소시키는 흐름이 이어질 개연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증권사들의 희비가 갈렸던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 관리만 해결된다면 여전히 증권사가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28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17.28%에

달한다. 동일 기간 고정이하자산(부실 자산 분류) 규모는 3조749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2조4401억원보다 53.7% 증가한 규모다.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보고서에도 2023년 들어 자금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있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여전히 위험성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공사 및 입주, 그리고 PF 상황 완료 이후에 위험이 해소되는 부동산 PF의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성과보수체계 설계나 심사부서의 요건 정비 등 부동산PF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반면,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PF 관련 이슈가 크게 있었고, 임직원이 면직되는 등 특이 케이스에 속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재작년처럼 좋아지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이복현 "공매도 금지 루머 유포... 불공정거래 등 엄중 단속"

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루머 등 시장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을 대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분별 시장 불안 조성 행위나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

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히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과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 출범

회사 이해 ↑·고위험 부분 감사 집중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과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담당자, 한공회·상장협,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분에 감사 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열린 킷오프 미팅에서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성공적으로 활

용할 경우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안전장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빅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에서 개발한 디지털 감사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한 업무자동화 등을 사용 중이지만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다.

T/F는 앞으로 ▲디지털 감사기술 현황 및 영향 분석 ▲디지털 감사기술의 검증방안 ▲데이터보안, 회계법인별 격차 완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